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부지원의
효과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나진희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부지원의 효과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의 차별적 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승 중

이 논문을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나 진 희

나진희의 정책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8월

위원장	<u>권혁주</u>	(인)
부위원장	<u>고길곤</u>	(인)
위원	<u>이승중</u>	(인)

국문초록

이 논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의 차이에 대해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경제와 함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최근의 SSM의 지역시장 잠식, 대기업 유치 중심의 지역경제 등으로 인해 지역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이러한 지역문제를 지역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이윤추구를 통해 자립적 운영을 하는 조직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성을 통한 자립적 조직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지원정책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지,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에서 정책의 주체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수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대해 정책대상자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따라 동원되는 자원의 종류와 규모의 차이가 정책대상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원주체가 중앙정부인 경우와 지방정부인 경우를 각각 조사한 결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나타났다. 공통점은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니셔티브가 되었다는 점, 인건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비탄력적인 재정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지방정부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은 법적지원(인증), 전담조직 지원(농촌활력과, 중간지원기관), 정보를 지방정부를 통해 지원받는 반면, 중앙정부를 통해 지원받는 조직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활용하거나(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활용(정보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지원기관에 따라 정책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 지방정부에 비해 재정적 수단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보적 지원 및 법적 지원, 그리고 공식조직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그에 반해 지방정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정책의 수단으로 조례나 인증 등과 같은 법적 지원, 관료제 내 과의 신설과 중간지원조직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은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부족한 정보나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는 지역 내 자원과 외부 연구조직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경우 지역 내 활용은 물론, 초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에는 지방정부의 법적·전담조직 지원 등이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은 정부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많이 만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가진 속성들을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려 전국 단위, 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나 전담조직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효과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책으로 흡수한 것은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았다. 분석한 사례 모두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를 분석하기에 다소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데이터 축적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정책수단, 정책 도구

학번: 2009-22080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및 범위	5
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5
2.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범위와 종류	8
제2절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지원	10
제3절 정부지원과 정책수단	11
1. 재정적 지원	13
2. 정보적 지원	15
3. 법적 지원	16
4. 공식조직 지원	17
제4절 선행연구 정리	18
제5절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해외의 정부지원 현황	19
1. 재정적 지원	20
2. 정보적 지원	21
3. 법적 지원	22
4. 공식조직 지원	22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의 분석틀	24
제1절 연구대상 선정	24
제2절 연구방법	25
제3절 연구의 분석틀	25
제4장 국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	27
제1절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	27
제2절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	32
1.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	32
2. 기초자치단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	34
제5장 사례 분석 및 결과	35
제1절 완주군 개요	35
1. 완주군 개요	35
2.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 추진 현황	37
제2절 중앙부처 지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 완주군 비비힐 조성사업	41
1. 비비힐 마을 개요	41
2.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과 비비힐 조성사업 개요	41
3. 정부지원에 대한 비비힐 마을 주민 인식	44
4. 소결	50
제3절 지방정부 지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 완주군 안덕 파워빌리지 마을	51
1. 안덕 파워빌리지 마을 개요	51
2. 안덕 파워빌리지 마을 사업	52
3. 정부지원에 대한 안덕 마을 주민 인식	56
4. 소결	62

제4절 정부지원의 효과 논의	63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의 공통적 효과	63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의 차별적 효과	64
제 6 장 요약 및 결론	66
제1절 요약	66
제2절 정책적 시사점	68
<참고문헌>	71

<표 차례>

<표 II-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성	8
<표 II-2> Hood(1986)의 실질적 도구 유형화	13
<표 IV-1>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	29
<표 V-1>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 일정	39
<표 V-2> 완주군 농촌활력과 구성 및 역할	40
<표 V-3> 비비정 마을의 신문화공간조성 사업 자원과 활용계획	43
<표 V-4> 비비힐 조성사업 개요	47
<표 V-5> 완주형 마을회사 모델	52
<표 V-6> 완주군의 단계별 마을 육성 전략	54
<표 V-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효과와 원인	65

<그림 차례>

<그림 II-1>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화	9
<그림 III-2> 연구의 분석틀	26
<그림 V-1> 완주군의 위치	35
<그림 V-2> 완주군 인구 추세(2007-2011)	36
<그림 V-3> 사단법인 비비정 조직도	44
<그림 V-4> 안덕 파워 영농조합법인 조직도	5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커짐은 물론 현실 적용에 있어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이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후 최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장과 정부가 사회적 문제해결 한계를 보이는 한편, 시민사회 영역도 ‘시민 없는 시민운동’으로 표현되는 참여의 한계와 더불어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재정확보의 문제를 내보이자 새로운 극복 방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새로운 문제해결방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의 한 영역으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local) 중심의 문제해결 방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제까지의 중앙정부 주도 개발방식은 지역경제가 자립심을 배양할 기회를 막아 왔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아직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발전의 추동력 저하와 인구유출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SSM의 지역시장 잠식, 대기업 유치중심의 지역경제 등 지역경제개발에 한계를 겪고 있다. 기존의 지역개발과 위기 대응주체는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정부였으나 현재의 위기는 중앙정부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중심의 문제해결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여건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방분권화의 진행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 향상, 시민과 지역주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가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면서 지역위기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이다.

오늘날의 지역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 현상이 종합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현장이자 문제해결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정규호, 2008: 114). 즉, 문제의 발생공간으로서의 지역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는, 능동적 주체로서 지역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해결 주체가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수익지향성과 지역공동체성을 특징으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쇠퇴하고 있는 지방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촉매제로, 지방의 해체에 대응하여 지방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침체한 지방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기관에 따른 정부지원의 효과를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 설정을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첫째,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이윤추구를 통해 자립적 운영을 하는 조직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절한지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재생이나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티 비즈니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은 정부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정책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윤추구 등을 통해 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영리성이 자립적 조직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지원은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자립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부지원은 사회적경제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정책이 유효한지, 정책수단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에서 정책의 주체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나 수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정책대상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지역의 쇠퇴와 실업문제를 현안문제로 인식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정책대상과 동원 가능한 자원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앙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가 지방정부에 비해 크다. 그러나 정책대상이 지방정부에 비해 광범위하여 정책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힘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의 정책대상은 중앙정부보다 한정되어 있어 지역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원가능한 자원이 중앙정부보다 작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정책을 서로 비교·대조하여 각각의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볼 것이다. 정책의 주체에 따라서 동원되는 자원의 종류 및 규모의 차이가 정책대상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기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는 해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사례 소개나 국내 사례의 성공요인 도출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 체계를 분석하고, 참여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책수단을 분석하려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및 범위

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의 유래는 1981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Community Business Scotland'라는 중간 지원 조직 형태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Pearce, J. 1993; Leeming, K. 2002; 현대경제연구원 2006; 김영수, 박종안, 2009; 김윤호, 2010; 이자성, 2010). 일본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확산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구도심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재생 방안으로 확산(호소우치 노부타카, 2007)되었으며, 1994년 호소우치 노부타카가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업 또는 단체를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부른 이후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용어가 일반화 되었다.

김윤호(2010), 행정안전부(2010) 등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주로 사회적 기업과 차별화되는 사회적경제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윤호(2010)에서는 목표나 이윤추구, 리더십의 형태, 조직규모, 구성원간 관계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사회적기업의 이전단계로 보고 있다(김윤호, 2010).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10)에서도 정책목표나 지역성, 사업주도층, 인증조건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을 다르게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을 완전히 배타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문순영, 2010), '지역

기반형' 사회적 기업(김중수, 2009), 그리고 최근 LH공사의 '마을형' 사회적 기업 등의 경우 실제 사업내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거의 같으며, 굳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기업 자체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선기(2011)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사회적기업과 차별화하기 보다는 사회적 기업 중 지역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 따로 구분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이와 별개로 커뮤니티 활성화나 지역 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지역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나 조직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나 연구보고서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사 아츠시(2008)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비즈니스적인 감각이나 기법을 이용해 지역 내 미활용 자원을 활용하면서 이윤추구를 첫 번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이나 삶의 질 향상,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격의 종류에 상관없이 비영리성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체 혹은 사업부문이라 정의하고 있다. CBN(2009)은 지역이 지닌 문제에 대해,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칭하였다. Hayton(2000)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는 역사적 맥락에 따른 자금조달 체제의 변화와 성공 모델의 등장에 따라 바뀌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그것을 소유하고 통제(control)하는 경제적 형태로 보고 있다. 즉, 여기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강한 사회적·공간적 강조점을 가진 자급자족의 한 방법이다. 이처럼 기존 문헌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 목적이

나 가치로서 커뮤니티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의 비즈니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커뮤니티와 비즈니스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Hillery, G. Jr.(1955)에서는 69개의 Community 주제로 하는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Community’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역(area), 연결망(ties),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포함하는 개념(Lyon & Miller, 1997: 42-43)임을 밝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커뮤니티의 개념을 ‘일정한 지역 내에서 연결망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할 수 있다.

Lyon & Miller(1997)에서는 커뮤니티는 정치적으로는 행정구역상의 경계, 경제적으로는 대도시(metropolitan)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 심리적으로는 근린(neighborhood)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곧 가족이나 친지, 사회적 계급과 같은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다(Lyon & Miller, 1997: 43).

함유근·김영수(2010)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역범위가 주로 생활권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행정범위와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커뮤니티나 지역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가 의미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경계짓기 어렵지만 일정한 공간 내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로 볼 수 있다.

한편, ‘Business’는 경제활동의 한 종류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 중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사업성·수익성 있는 활동’(김재현, 2008), 또는 ‘거래방법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자활이나 향후 발전가능성’(Tony Gore et al., 2006)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비즈니스는 영리활동, 경제적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주로 정의되었던 목적 중심의 ‘커뮤니티’ 의미와 수단 중심의 ‘비즈니스’가 아닌 커뮤니티와 비즈니스 가치와 수단을 각각 고려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 정의한다.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사회적경제의 한 영역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과 이윤 및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경영하는 방식으로 지역활성화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성

	지역성(community)	사업성(business)
가치적 측면	지역문제해결, 지역 활성화	지속적인 운영, 고용과 이윤창출
수단적 측면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참여	경영관리 기법 활용

2.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범위와 종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용되는 사업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은 사업의 성격이 지역성과 사업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아이템에 적용될 수 있다. 박용규(2009b)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분야에 대해서 사업성격(공공-수익), 지역(도시-농촌)을 기준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 유형화 및 사업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그림 II-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분야에 대해 특정한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이자성(2010)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분야에 대해 일반 영리기업과 NGO의 중간 영역으로 기존 행정부문이나 NGO가 제공하기 힘든 ‘지역수요자 기반 다품종 소량 제품 및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이자성, 2010: 6)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분야는 특정하게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지역사회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 또는 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하는 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1>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화



출처: 이용규(2009b: 5).

제2절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지원

가네코 이쿠요(2010)에 따르면,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NPO법의 시행을 통한 법인 기업의 자격 취득 용이성과 주민참여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NPO 지원과 NPO 파트너십 정책의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의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이나 지원 확대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반드시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NGO의 경우 정부지원이 NGO가 가져야 할 자율성과 재정독립성을 침해하거나(박상필, 2004)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지적된 바 있다(김선기, 2011; 김혜원, 2010; 박찬임, 2009).

그러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지원은 일방적으로 정책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에 대해 민관협력을 위한 파트너로서 정부가 협력하는 형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조규원·최조순·김종수(2011)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적 정당성을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즉,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유사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1조 법의 목적에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지원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민관협력이란 정부와 주민 혹은 시민간의 파트너십이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구분된 상태로 양자의 결합된 노력으로 수렴된 목표를 추구하려고 디자인된 상호작용'(Brinkerhoff, 1998; 주성수, 2008 재인용)이다.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기존의 시장실패, 정부실패나 시민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자원을 가진 정부가 지원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파트너십이라는 측면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제3절 정부지원과 정책수단

정부지원이란 정부가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다.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분류방법은 규제(regulation), 유인(incentives), 설득(persuasion)의 세 가지 분류이나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의 분류를 다양하게 제시해 왔다. Gormly(1987)는 강제적(coercive), 촉매적(catalytic), 권고적(hortatory) 수단으로, Vedung(1998)은 전통적인 정책도구 분류에 따라 채찍(sticks, 규제도구), 당근(carrots, 정보도구), 설교(sermons, 정보도구)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분류방식에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Salamon(2002)은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 이후 정부의 간접적 정책도구

활용까지 포착하기 위해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책임성 등과 같은 평가 기준과 직접성, 강제성, 가시성, 자동성 등의 정책도구 특성을 기준으로 직접정부, 공기업, 경제적/사회적 규제, 정부보험, 정보제공, 세금, 부과금, 유통거래권, 민간위탁, 구매계약, 보조금, 융자, 보증, 세금지출, 바우처의 9가지 분류를 시도'하였다(전영한·이영희, 2010: 95).

이처럼 정책도구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Hood(1986)의 정책도구 분류를 사용하려 한다. Hood(1986)는 정부가 보유한 자원의 성격에 따라 정보(nodality), 권위(authority), 재정(treasure), 공식적 조직(formal organization)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부지원을 재정적 지원, 정보제공, 법적지원, 담당 행정조직으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Hood(1986)의 정책수단 분류를 선택한 이유는 Hood(1986)의 분류가 공공재나 서비스의 배분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정책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또한 자원의 특징을 기준으로 구분(문명재, 2009: 322)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자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에 적절한 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Hood(1986)의 분류에 따른 정부지원의 분석이 향후 논의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의 종류와 자원을 파악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Hood(1986)는 자원의 특성에 따라 '정보적(information), 강제적(corrective), 재정적(financial), 조직적(organizational)'으로 나누었는데, 또한 정보적 자원은 중심형(nodality) 강제적 자원은 권위형(authority), 재정적 자원은 재원형(treasure), 조직적 자원은 조직형(organization) 정책도구로 보았다. 또한 '정책도구의 목적을 사회행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과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원화'(문명재, 2009: 326)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 하려는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Hood(1986)의 정책분류 중 사회 행위자의 행동변화 목적에 따른 4가지 유형의 정책도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표 II-2> Hood(1986)의 실질적 도구 유형화

		A Taxonomy of substantive policy instrument			
		중심형	권위형	재원형	조직형
목적	사회행위자의 행동변화	자문, 훈련	규제, 사용료, 자격증	보조금, 대출, 조세지출	관료제, 공기업
	사회행위자의 행동감시	보고, 등록	인구조사, 상담	여론조사, 경찰보고	녹음, 설문지

출처: Hood(1986: 124-125), Howlett(2005: 46)를 문명재(2008: 327)에서 재인용

1. 재정적 지원

Hood(1986)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적 도구에는 대출, 보조금, 조세지출 등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금마련 등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영역의 조직들은 아직 사업 초기이거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재원확보는 중요한 부분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정책 대상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며, 실제 지원의 성과를 뚜렷이 보이는 부분이다.

김진범 등이 연구한 국토개발원의 보고서(2009)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2개 인증 사회적 기업과 자활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

요한 분야는 ‘단체의 재화와 서비스 우선 구입’과 ‘단체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로 나타났다. 즉,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지원 중 재정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혜민(2010)은 일본 이와후네 지역사례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의 제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보조금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의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아직 초기 단계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석표(2009)에서는 일본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는 물론, 국책금융기관인 국민생활금융공고, 중앙노동금고 외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에서도 국가의 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석표(2009)에서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조세감면 등 재정지원 형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끼치거나, 정책수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한 지적도 있다.

김선기(2011)의 2010년 선정된 마을기업을 대상 실태 조사에서는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인건비 중심의 직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지원금의 중단 혹은 축소에 따른 지속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종수(2009)에서는 지역기반형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이 사업초기의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는 하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인건비 지원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혜원(2010) 역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사업운영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영성과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정부 지원에 의존

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는 정부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정적 지원은 보조금이나 대출 외에도 세제혜택이나 감면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한다. 최호운(2010)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세제 지원정책의 실질적 효과성을 고찰한 결과, 사회적 기업들이 법인세 신고를 통해 감면효과를 기대하였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최저한세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호운(2010)에서는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제약 때문에 재정지원이 정책 수단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2. 정보적 지원

정보적 도구에는 자문, 교육·훈련, 보고, 등록 등이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조직들의 사업성 확보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영이나 재무 등에 있어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사안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논문으로는 이윤정(2010), 이현상 외(2010)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윤정(2010)에서는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교육 훈련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현상 외(2010)에서는 전북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 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 논문 모두 사회적 기업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의 지속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이현상 외(2010)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훈련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3. 법적 지원

Hood(1986)에서 언급한 ‘권위’의 정책수단에는 규제, 사용료, 면허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경우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은 정부가 심사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제공하는 일종의 ‘면허’로서, 인증을 받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김중수(2009)는 지역기반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사회적 기업과 정부지원과의 분석결과 사회적 기업의 인증이 조직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침을 밝혔다. 사회적 기업이 공식적으로 인증됨에 따라 재화와 용역의 분배 양식이 변화하며 기업 내 경제적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병준(2010)에서는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인증절차와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로워 오히려 사업활동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먼저 활성화 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법률의 제정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석표(2009), 안혜원·이민규(2010)에서는 일본의 경우 NPO법(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정 이후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법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주체가 법인격을 쉽게 얻을 수 있어 독립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4. 공식조직 지원

공식 조직적 지원에는 정부와 공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공식조직의 지원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업무담당 조직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등을 포함한다.

이석표(2009)에서는 일본의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광역 칸토권 CB 추진협의회는 칸토경제산업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CB를 실시하는 쪽’과 ‘행정기관’ 외의 ‘지원하는 쪽’으로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창출과 육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혜민(2011)에서는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비중에 따라 관주도형, 민관협력형, 민간주도형으로 나누어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관주도형인 이와후네 지역의 경우, 공공부문이 협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존의 계층제적 경직성을 완화하고, 정책결정 및 집행형태를 보다 수평적인 거버넌스 유형으로 전환하는 광역사무조합을 구성하였다. 광역사무조합뿐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인 츠리사라파트너스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을 형성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츠리사라파트너스센터는 기존의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주체였으나, 주민들의 활력있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 기관을 통해 주민과 NPO, 기업, 행정기관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고, 파트너십에 기초해 민간 및 행정의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정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조직들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절 선행연구 정리

기존의 논의를 재정적 지원, 정보적 지원, 법적 지원, 공식조직 지원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적 지원의 경우 필요성이 큰 반면,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초기 단계에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들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자생적으로 생겨났기 보다는 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통해 활성화되었다.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이 생겨나는 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 지원의 경우에도 중요성은 언급되고 있다. 정보 지원의 경우 교육·훈련, 경영컨설팅, 재무, 회계 등 사업아이템뿐 아니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 지원의 종류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로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 지원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인증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인증이 기업 내 분배방식 등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인증을 하고 있으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완주군에서 최근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

고,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파워빌리지 등을 선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이나 사업 선정, 법의 제정은 재정적 지원이나 정보적 지원의 근거나 자격요건으로 작용한다. 일본의 NPO법의 경우 법인격 취득을 용이함으로써 위탁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지원금·기부금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우리나라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인증이나 법의 제정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공식조직 지원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 외의 정부 내 담당 조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공식조직의 경우 그 자체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재정과 정보의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공식조직 지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함께 정부 내 담당조직이 지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제5절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해외의 정부지원 현황

앞 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사회적 기업 등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해외 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에 대해 재정, 정보, 법적 지원, 공식적 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한다.

1. 재정적 지원

영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식은 Glasgow Works와 Wise Group 등 고용을 위한 단체에 대한 운영자금 조성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Glasgow Works와 Wise Group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들로부터 조성된 자금으로 운영되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된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사회공헌형사업 용자제도’는 사회공헌형 사업의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 목적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공공금융기관에서 설비자금과 장기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각 지자체별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긴키지방 효고현의 경우 ‘커뮤니티 비즈니스 제도진입 지원사업’, ‘효고 자원봉사기금’, ‘NPO 활동지원금 용자’ 등의 재정적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제도진입 지원사업은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조직에 설립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보조액은 100만 엔으로 1년간 지원하며, 보조대상 경비는 사무소 개설비, 초기비품비, 인건비 등이다.

그리고 효고 자원봉사기금은 기금의 운영이익을 이용해 자원활동 단체에게 현민 자원활동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NPO 법인에 행정부처의 협력에 의한 조치지원, 네트워크 확대, 활동 레벨 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NPO활동지원금 용자는 효고현 내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NPO 법인에게 설비자금, 보조금 등이 입금될 때까지

연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이다(희망제작소, 2010: 34-40 참조하여 정리).

2. 정보적 지원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사업은 주로 경제산업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선진모델 타 지역 이전 지원 사업'을 통해 성공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산업성이 성공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재정을 지원하면, 선정된 조직이 새로운 담당자에게 사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성과 사업성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노하우의 이전과 인재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6개 기관에서 이루어지던 중간지원기능강화를 57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선진모델 발굴과 더불어 지역재생에 적극적인 젊은이들을 육성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업인 인재창출사업은 지역재생을 위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사업자 및 전문가가 새로운 세대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Social Business 관계자들의 협력을 위한 SB추진이니셔티브를 구성하고, 선진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 지역블립협회 9곳을 설치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구성원의 연대강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선진사례 선정 및 공표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김혜민, 2011: 71-73 참조).

3. 법적 지원

2004년 영국은 CICs(Community Interest Companies)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형태를 명확히 하고자 시도하였다. 기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영리기업이나 협동조합, 자선단체 등 여러 형태를 띠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른 법적 지원이 다소 어려웠다. 그러나 CICs에 대해 법적으로 1) 사적이익보다 지역사회의 이익을 우선함, 2) 세계상의 혜택을 받지 않으나 자선단체보다 유연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격에 보다 부합하는 조직을 공식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게 하였다(정대용·이세호, 2008; 김혜민, 2011 참조하여 정리).

일본역시 특정 비영리 활동 촉진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은 특정비영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봉사활동을 포함한 시민의 자유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함으로써 특정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의 NPO로서 법인격 취득이 용이해졌고, 법인격 취득을 통해 위탁계약의 주체가 되거나 기부금·지원금을 받는 것이 용이해졌다(정대용·이세호, 2008, 김혜민, 2011).

4. 공식조직 지원

최근 미국에서는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s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 지원과 관련이 큰 부처에 FBCI 지원추진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통한 사업 위탁 확대, 보조금 용자, 평등한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철폐 등이 추진되고 있다(정대용·이세호, 2008).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간지원기관 지원의 일환으로 중간지원기능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간지원기능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창업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제산업성이 중간지원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면, 중간지원기관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을 선정하여 다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식조직 지원과 관련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는 효고현의 보람찬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을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효고현 내 여섯 지역에 중간지원조직을 두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방식은 효고현이 중간지원조직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여섯 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창업상담, 세미나, 실무에 대한 강연, 무료직업 소개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이다.

내고향 커뮤니티비즈니스 창출 지원사업은 고용관련 기금을 활용해 보람찬 일자리 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정책은 국가가 효고현에 준 교부금을 통해 내고향 고용재생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중간지원NPO에 위탁하여 NPO에서 실업자를 고용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의 분석틀

제1절 연구대상 선정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 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아직 도입 초기로, 활성화 된 지역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 된 지역인 전북 완주군을 대상으로 하여, 완주군의 지원을 받는 안덕 파워빌리지 마을과 중앙정부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비비정 마을을 선정하였다. 이는 완주군이라는 동일한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주체가 중앙정부인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비교하여 지원주체에 따라 지원체계나 정책수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전북 완주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과 관련된 조례 제정 및 중간지원기관을 설립하는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있어 선도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완주군의 파워빌리지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안덕 마을을 선정하였다.

또한 완주군 삼례읍 비비정 마을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당선되었다. 비비정 마을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마을의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2년에는 사단법인 비비정을 설립하여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절 연구방법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론 연구를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비롯한 사회적경제 등과 관련된 문헌이나 논문, 관련 제도 등을 분석할 것이다.

커뮤니티 사례분석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 된 지역을 선정한 후, 정부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려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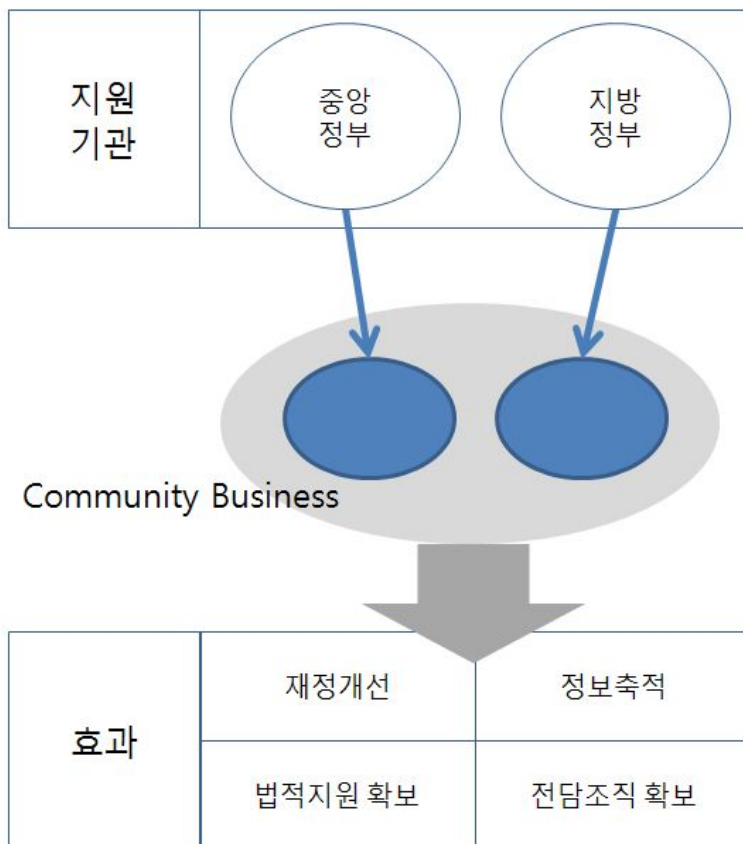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와 인터뷰를 택한 것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해서 아직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며, 자료가 행정이나 기업영역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이지 못하고 정보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이석표, 2009: 69)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 접근의 한계를 차치하고라도, 본 연구가 향후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상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전북 완주군) 내에서 중앙정부(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비비정 마을과 지방정부(완주군)의 과워빌리지 마을로 선정된 안덕마을에 대한 정부지원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효과 분석은 Hood(1986)의 정책수단 분류에 따라 재정적 지원, 정보 지원, 법적 지원, 전담조직 지원으로 나누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업에서 재정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영

컨설팅이나 교육 훈련 역시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인증과 같은 법적 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에도 있는지, 있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전담조직 지원과 관련하여 완주군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농촌활력과를 만들어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개소하였다. 농촌활력과,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공식조직을 통한 지원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려 한다.

<그림 III-2> 연구의 분석틀



제4장 국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

제1절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2010년 희망근로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자립형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사업명칭을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까지 1,00개의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내 안정적인 일자리 1만 개를 창출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자원활용형, 친환경·녹색에너지 사업, 생활지원·복지형 등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연차별 사업비 지원,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행정·기술지원을 위해 시군구-읍면동-농업기술센터를 연계한 지역단위의 마을기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추진 중에 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기업 혹은 주민주도의 지역활성화사업을 지칭한다.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총 54개 사업 지원으로 시작하여 2015년까지 3,000여개 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역연구산업육성(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사업의 2010년 과제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의 잠

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커뮤니티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를 목표로 3년간 30개 이상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및 인증제 도입을 통해 시작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5월 기준으로 인증 사회적 기업 532개, 예비 사회적 기업 1,005개에 대해 지원 중이며, 2012년까지 1,000개의 인증 사회적 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의 자활공동체 사업(2000년-),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2010년-) 등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들이 각 부처마다 추진 중에 있다.

<표 IV-1>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

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마을기업육성 사업	농어촌공동체회사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담당 부처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사업 연도	자립형마을공동체사업 (2010년) 마을기업(2011년-2013년)	2011년-2015년	2010년-2013년(계획)	
주요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근로사업의 후속 사업인 지식공동체일자리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적 자립형 지역공동체(마을기업)사업 병행 2013년까지 1,000개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 단위의 안정적인 일자리 1만 개 창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이 농어촌지역에 진입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자립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혁신센터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시범사업 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 및 활용하여 커뮤니티 문제해결,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를 목표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입 2010년 말 기준 501개 사회적기업이 인증받음, 여기에 따라 경영 컨설팅, 재정, 홍보 사업을 지원받고 있음

<표계속>

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마을기업육성 사업	농어촌공동체회사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인증 및 선정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종류를 지역자원활용형(지역특산품, 문화), 자연자원활용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사업(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생활지원복지형(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공동체 회사를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형으로 분류 • 공동체성, 지역성, 수익성, 자립성, 공유성, 범인성을 평가하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의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에 근거를 둔 기관(조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포함) 및 단체 • 시범사업 선정 후 2개월 내 사업시작이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자 • 기존의 커뮤니티 중심사업형 활동에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형태는 민법상의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 목적 실현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이나 규약 마련

<표계속>

사업	자립형 지역공동체 /마을기업육성 사업	농어촌공동체회사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창출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 기본적인 지침과 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 지정과 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시군구-읍면동-농업기술센터를 연계한 지역단위의 마을기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성과 수익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연고산업육성 (Regional Innovation System) 사업의 2010년 신규과제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에 초점
비고	2011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명칭 변경	-	2011년 사업중단	-

※ 희망제작소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소(<http://blog.makehope.org/cb/83>)를 참조하여 정리함.

제2절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LH공사가 ‘마을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

광역자치단체는 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지원을 추진(김선기, 2011)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경기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사업’, 충남의 ‘충남형 사회적기업 비정제’, 경북의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있다.

서울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2009년 시작하여 2010년 5월 기준으로 195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운영자금, 홍보, 마케팅 및 판로개척 순임을 인지하고, 시설확충 및 운영자금,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하여 각종 경영, 재정, 홍보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며,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청남도는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통해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 사업가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간지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기준 37개소가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상북도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직을 모집, 심사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발전을 돕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특히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하고 지역공동체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2. 기초자치단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

최근 지역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 별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는 전북 완주군 외에 전남 순천시가 있다.

순천시의 경우 신도심이 생겨난 이후 구도심의 공동화, 이로 인한 지역의 소규모 상권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와 농촌의 연계가 중요성이 인식, 농업·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노후생활 불안, 실업률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순천시는 시정의 모든 분야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확산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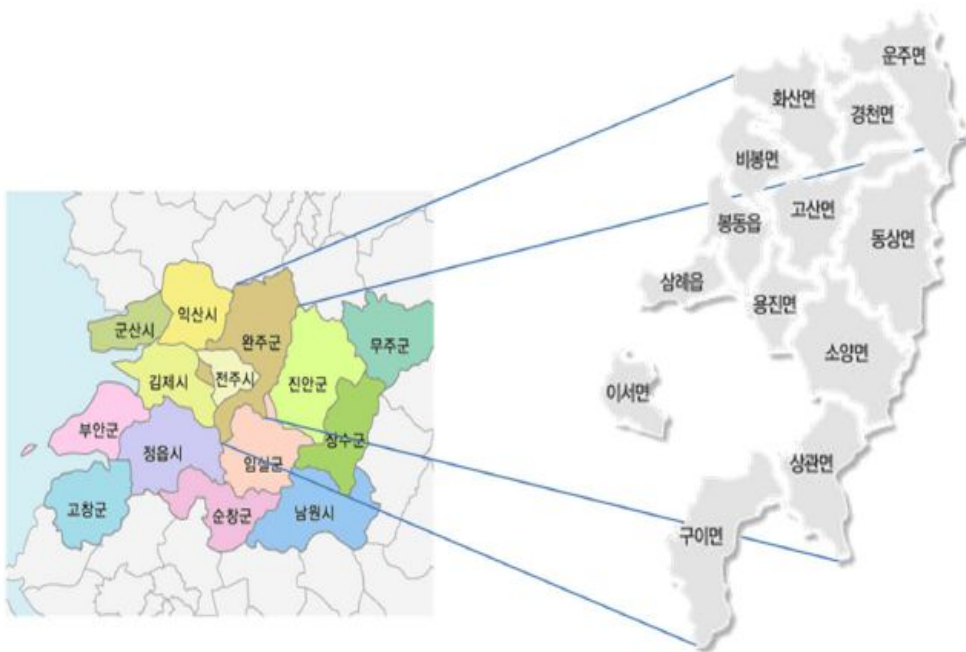
제5장 사례 분석 및 결과

제1절 완주군 개요

1. 완주군 개요

완주군은 전라북도의 중앙에 위치한 도농복합도시로서, 13개 읍면(2읍 11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 진안군, 김제시, 임실군, 정읍시, 익산시, 충남 논산시, 금산군과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전주시의 배후도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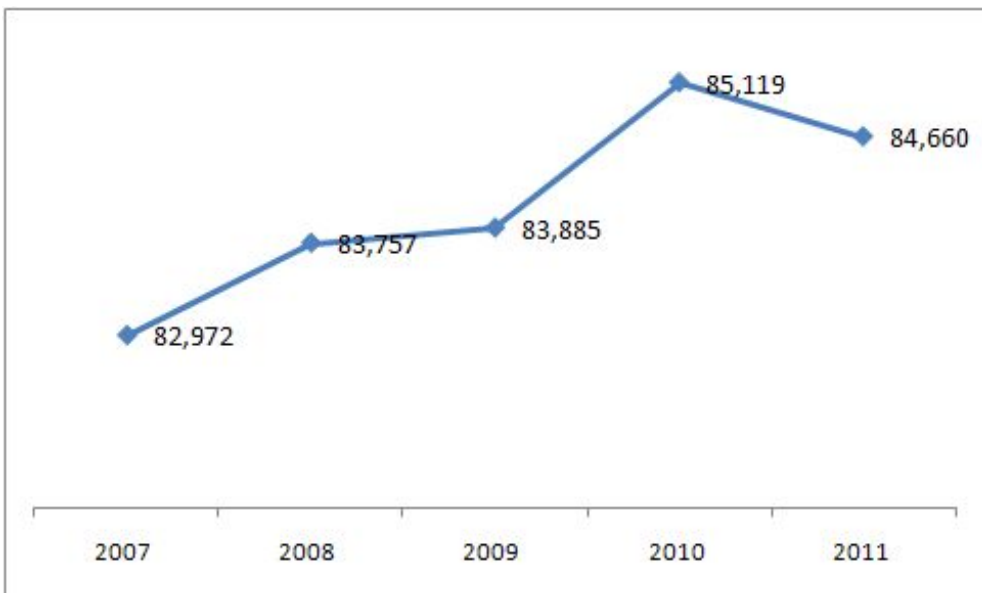
<그림 V-1> 완주군의 위치



예산규모는 약 6천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2.9%이다. 인구는 2011년에는 84,660명으로 2010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간 인구 추세를 살펴보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V-2> 완주군 인구 추세(2007-2011)

단위 : 명



출처: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인구통계

이러한 인구 증가추세는 완주군 봉동읍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완주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들의 외부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완주산업단지는 2005년 말 기준 도내 대기업 유치 1위로 대기업 유치로 인한 투자액 3,914억 원, 고용창출 1,715명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김준호, 2010). 그러나 실제 대기업 유치로 인한 고용창출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

기업 노동자의 경우 타 지역 연고가 대부분으로 실제 완주 주민의 고용창출의 정도가 낮았으며, 완주가 인근 전주시의 배후지역의 성격을 띠어 전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완주 내 지역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완주군 사업단지 내 대기업을 내는 지방세 120억 원은 전체 재정의 3.8%에 불과했다. 이처럼 완주군은 대기업을 산업단지의 유치에도 불구하고 지역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과제에 당면해 있었다.

또한 2011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완주군의 고령자¹⁾ 비율은 19.4%로 전국평균인 11.0%를 훨씬 상회하며, 20%이상의 초고령 시군구에 거의 근접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2011 고령자통계).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지역의 활력감소와 연결된다.

또한 완주군 2011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농가 9,232 세대 중 약 72%(6,610 세대)가 경지면적 1.0ha 미만의 소규모농가이다. 이서면, 삼례읍, 봉동읍을 제외한 10개 면은 전형적인 농산촌 지역으로 해당 인구의 약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마을이다.

완주군의 2014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의 부족, 동일 성장권역으로 상존하는 경제적 흡수가능성 등이 완주군의 발전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완주군은 2007년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탐방과 희망제작소와의 MOU 체결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와 지역경제순환센터의 개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다.

2.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 고령자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상이하나, 『2011 고령자통계』에서는 주로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의 시작은 2007년 하반기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단체장 연수로 볼 수 있다. 당시 연수에 참여하였던 임정엽 군수는 연수에서 완주군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인식(권홍재, 2011 참조)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완주군은 희망제작소와의 MOU 체결, 정책 심포지움, 선택리지 연구 용역 사업²⁾을 통해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기반들을 닦아 나갔다.

완주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지역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9년 12월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2010년 10월,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기존의 사업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즉 단체장의 임기가 끝날 시 사업이 종료되는 등 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완주군의 특징 중 하나는 농촌활력과의 존재이다. 완주군은 2010년 7월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여 여러 실·과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조직을 정비해 행정의 종합적이고 일원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마을기업 관련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선택리지 사업이란 완주군이 발주하고 희망제작소가 연구한 사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의미를 가짐. 선택리지 사업에서는 마을평가를 통해 도출된 지역의 문제를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함.

<표 V-1>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 일정

일시	내용
2007년 하반기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단체장 연수
2008년 3월	희망제작소-완주군 MOU 체결
2008년 4월	완주군 대상 제안
2008년 4월	완주군 제안설명회 개최, '완주군에서 블루오션을 발견하다'
2008년 7월	정책심포지움 개최, 선택리지 사업 시작
2008년 8월	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 설립
2008년 9월	제1회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일 포럼 개최
2009년 1월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공모 당선(비비정마을, 28억 원)
2009년 6월	선택리지 사업 완료
2009년 7월	CB시범사업1차공모(완주군 주관)
2009년 7-9월	CB센터 설립 운영방안 연구
2009년 10월	CB센터 설립준비단 시작
2009년 12월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에 관한 조례 제정
2010년 2월	CB시범사업2차공모(완주군 주관)
2010년 5월	CB재단 설립, CB센터 개관
2010년 7월	농촌활력과 신설
2010년 10월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완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0년 11월	지역경제순환센터 개관 제2회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일 포럼 개최
2011년 9월	제1회 완주 와일드 푸드 축제 개최
2011년 11월	제3회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일 포럼 개최

출처: 김준호(2010)에 추가하여 정리

<표 V-2> 완주군 농촌활력과 구성 및 역할

담당구분	정책과제	통합·협력지원 분야
마을회사 육성 담당	농업농촌 특화사업 발굴지원 마을 공동체회사 모델 발굴 공동체회사 창업보육 총괄지원 지원조직육성(호민관, 마을리더 등)	로컬푸드농식품 기획생 산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지속가능한 농교류전략
로컬푸드 담당	기획생산 총괄관리 로컬푸드지원센터 건립 로컬푸드 소비영역 확대	마을회사 및 지역공동 체 협업생산품 로컬푸 드 책임유통
도농순환 담당	도시커뮤니티-마을 연계사업 도시민 유치(귀농귀촌)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발굴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시스템 지역사회 기여형 귀농 귀촌
지역일자 리 담당	지역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 한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발굴, 육 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담당	완주형 CB모델 발굴 육성	지역사회 기여형 일자 리 창출 및 사회적 기 업으로 발전, 육성

제2절 중앙부처 지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 완주군 비비힐 조성사업

1. 비비정 마을 개요

비비정 마을은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내에 있는 비비정이라는 정자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비비정 마을은 마을이 언덕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지가 없어 큰 농사가 힘든 지역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비비정 마을 근처 만경강 주변의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만경강 주변 공장단지가 들어서면서 모래채취가 어려워지자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가까운 공장이나 농장이나 일용직 노동이 종사하였다.

주민 70여 명, 3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80% 이상이 70대 여성으로, 비비정 마을의 경우 마을의 수익성 있는 사업과 동시에 마을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2.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과 비비힐 조성사업 개요

2009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완주군의 제안으로 신청을 하고 공모에 당선되어 3년간 28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2009년 6월에는 마을 주민협의회와 완주군, 희망제작소를 주축으로 ‘비비힐 추진사업단’이 만들어져 희망제작소에서 실무진을 현지에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란 지역 내 유·무형의 문화를 매개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농교류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하여 교류문화의 생활화 유도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하드웨어(공간구성), 소프트웨어(공간의 활용측면), 휴먼웨어(사업추진 조직 및 운영주체의 역량측면)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비비정 마을의 경우 하드웨어로 비비랜드를 조성하여 비비랜드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로 비비랜드에 입주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휴먼웨어로 마을운영, 경영, 관리, 재무 등을 구상 중이며 현재 추진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 목적은 농촌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문화공간 조성을 도농교류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 비비정 마을의 경우, 이 사업을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삼고 있다.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에 농가레스토랑이나 마을의 카페를 입주시키고, 공간활용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휴먼웨어를 활용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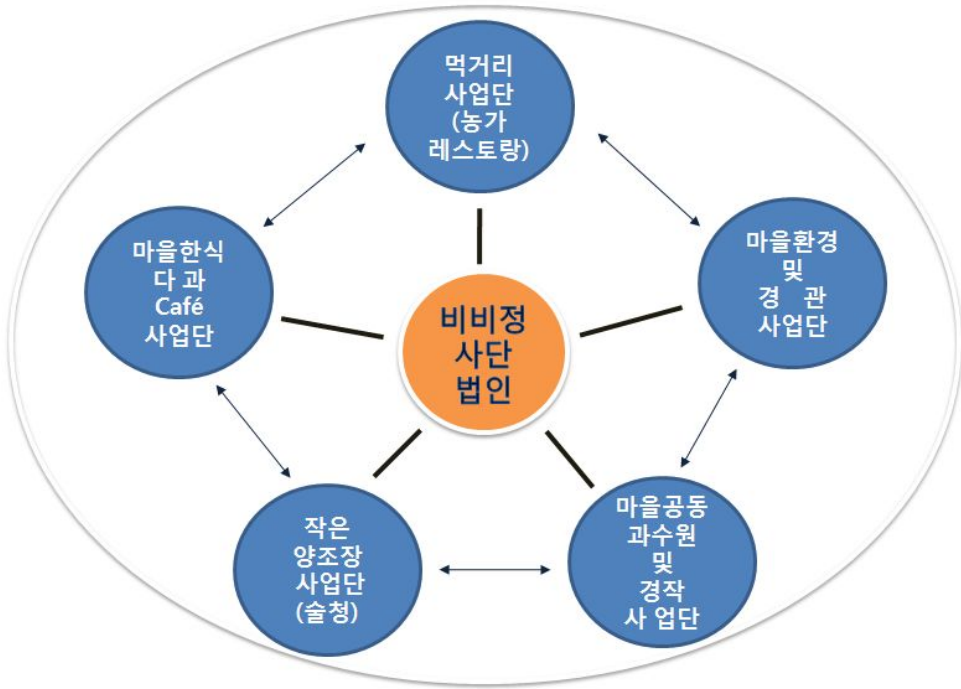
비비정 마을에서는 2012년에는 사단법인 비비정을 발족하여 작은 양조장 사업단, 떡거리 사업단(농가레스토랑), 마을 한식 다과 카페 사업단, 마을 공동 과수원 및 경작 사업단, 마을환경 및 경관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하게 될 공간은 아직 건설 중에 있다. 아직 입주가 되지 않았지만 마을 공동 과수원의 자두수확을 통해 수익을 창출(2011년 약 800만 원 가량)하거나 농가 레스토랑은 공사 함바집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각종 대회를 통해 기량을 확인받고 있다. 작은 양조장 사업단에서도 만든 술을 판매하고 있다.

<표 V-3> 비비정 마을의 신문화공간조성 사업 자원과 활용계획

계획 요소	유·무형 활용 가능한 자원	활용계획
하드 웨어	만경강, 비비정, 호산서원, 습지	만경강 전망대, 수생화원, 텃밭조성
	삼례양수장(1920년대), 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비비랜드(농가음식문화공간, 마을문화갤러리, 주민예술창작공간), 야외공연장(문화카페), 에너지놀이터
	전라선철로, 역사길, 만경강 낙조, 삼례5일장	비비힐 만경강 산책길
소프트 웨어	딸기축제, 당산제	비비랜드 운영 프로그램 (권예술창작공간, 마을문화갤러리, 농가음식문화공간), 마을 공간문화 디자인 프로그램, 마을동영상
휴먼 웨어	완주군 청소년 수련관, 완주 문화의 집 예술인들	마을운영, 경영, 음식개발, 관리, 재무, 회계, 친환경농법, 생태교육, 가양주 교육과 관련지 견학 등으로 주민역량 증진, 지역네트워크 조직

출처 : 전영미(2011: 200)

<그림 V-3> 사단법인 비비정 조직도



출처: (사)비비정 내부자료

3. 정부지원에 대한 비비정 마을 주민 인식

비비정 마을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 공모에 당선이 되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각종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단법인 설립으로 이어졌다. 김혜민 (2010)에서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니셔티브가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비비정 마을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사업공모 당선과 여기에 따른 지원금이 마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가져왔다. 여기에 대해 비비정 마을의 이장이자 (사)비비정의 이

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농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대해 지원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 제주도 등 도별로 하나씩 6개 마을이 시작했는데 우리 마을은 전북.

-비비정 마을 이장/(사)비비정 이사장

비비정 마을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28억 원이라는 지방정부 지원금에 비해 큰 규모를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나 예산 내역에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이 없다는 점,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재정적 지원이 마을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사)비비정의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인한 하드적인 것, 그리고 소프트적인 것은 시설물 관리 운영비 등 내공을 다지는 쪽인데...(중략) 일부의 인건비가 지원 될 수 있는 루트를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파워빌리지와 같은 사업은 사무국이나 관리비 등으로 인건비 한 명 정도는 나오고 있지만 우리 마을은 혜택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부담될 것이라 봅니다. 나중에는 전기나 수도 등...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지원이 되었으면...

-비비정 마을 이장/(사)비비정 이사장

신문화공간사업도 맹점이 많거든요. 하드웨어 조성이 약 70%인데, 건물이 지어놓는다고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을 컨설팅하러 왔는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비용이 크다보니 교육이나 육성 비용이 떨어져요. 때문에 처음보다 하드웨어 비용을 소프트웨어로 옮겼어요.

-(사)비비정 마을사업기획매니저

<표 V-4> 비비힐 조성사업 개요

사업구분	실행내용	투자액
건축설계 및 시공	부지매입(군): 비용과 가능범위	5억 원
	실시설계: 입찰, 현상경쟁(규모, 기능, 대지면적, 법제, 수용인원, 위치조건, 평당 건축비, 에너지 절약방안) 도시공원 변경계획	8천 1백만 원
	건축시공비	15억 4백만 원
	건축시공 감리비	8천 9백만 원
	합계	21억 7천 4백만 원

사업구분	실행내용	투자액
휴먼웨어/ 소프트 웨어	비비정 마을공동체 운영비 (비비힐 추진사업단)	6억 2천 6백만원
	농가음식문화사업 작은 양조장 한식다과 카페 경관 및 공동텃밭 디자인 프로그램 공동체 문화축제 및 교육(캠프) 프로그램	

출처: (사)비비정 내부자료

정보 지원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공하기 보다는 비비힐 추진사업단에 희망제작소의 실무진이 투입되면서 확보되었으며, 현재도 사단법인 비비정-희망제작소의 MOU 체결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또

한 완주군에서 제공하는 교육기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다. 신문화공간 재생사업의 사업주체는 농림수산식품부지만, 비비정 마을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교육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성격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정보의 경우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비정 마을 이장은 희망제작소와의 관계와 완주군에서 제공하는 교육기회의 저극적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아무래도 사무국장(희망제작소에서 투입된 연구원으로 현재 비비정 마을로 주소지를 이전)은 희망제작소에서 와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희망제작소와 이제 손을 끊고, 이것은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MOU 체결한 것이죠. 마을의 발전적인 방향, 우리가 정보가 필요하면 교류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요구하고, 요청하는 방향으로.

-비비정 마을 이장/(사)비비정 이사장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다른 데에서는 한 두 명씩 참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은 다섯 명까지 참석합니다. 결국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비정 마을 이장/(사)비비정 이사장

완주군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비비정 마을의 비비힐 추진 사업단 구성 당시 완주군이 주축으로 참여하였지만,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따라서 비비정 마을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조례가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담조직 지원의 경우, 비비정 마을은 농림수산물식품부 담당자와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완주군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는 중앙부처의 사업예산을 완주군에서 받아 관리·감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중앙정부의 사업비 역시 군을 거쳐서 지급받고 있었다. 비비힐 조성사업의 시작도 완주군의 제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비비정 마을의 사업 처음부터 완주군이 관여하고 있었다. (사)비비정의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대부분 완주군이요.

-(사)비비정 사무국장

처음 사업단 추진할 때부터 완주군이 관리감독 역할로 들어와 있었어요.

-(사)비비정 사무국장

4. 소결

비비정 마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농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이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정책수단은 재정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재정적 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비정 마을의 경우 지원금액도 지방정부 사업 등에 비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비비정 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은 지원금의 비탄력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의 경우 지원금의 규모는 크지만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 이 때문에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공간이 완공된 후 실질적으로 진행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데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한다. 또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어 사업이 더욱 안정될 때까지는 인건비가 지원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비비정 마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재정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참여자들은 정보획득 및 교육 등에 대해서는 완주군 내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비정 마을 구성원들은 교육이나 정보 획득에 있어서도 완주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결국 중앙정부의 큰 규모의 재정적 지원이 마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니셔티브가 되었지만, 다른 형태의 지원은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완주군이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절 지방정부 지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 완주군 안덕 파워빌리지 마을

1. 안덕 파워빌리지 마을 개요

안덕 파워빌리지 마을(이하 안덕마을)은 4개 마을 144가구 약 270명의 주민이 있으나 실제 거주자는 약 150명으로 대부분의 주민이 7-8세대이다. 안덕마을은 완주군 구이면 내 모악산 자락에 위치하여 등산로 진입이 용이하다는 점, 연간 3-4만 명이 찾는 유명한 민속한의원이라는 점 등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추진하였다.

2007년 9월 주민들이 마을 자원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려는 마을을 지원하는 완주군의 '파워빌리지'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후 마을은 건강을 중심으로 한 마을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 1천 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다.

2009년에는 23명으로 시작한 안덕 파워영농조합법인은 여덟 달만에 조합원이 53명으로 늘었고, 출자금도 1억 3천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60여 명의 상근 및 주기적 고용 일자리가 발생하고 월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에 이르렀다.

출자금을 통해서 마을 내 찜질방을 대여하여 아토피 힐링캠프, 건강·힐링교실 등을 운영하는 동시에 펜션사업도 하고 있다. 안덕마을은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 고용과 기존의 마을에서 팔던 김치나 간장, 된장 등의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었다.

현재 안덕마을은 황토흔증막과 유기농 건강식 식당의 운영 인력을 마을 내에서 고용하여 자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통마진을 전혀 남기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를 실현하는 농산물 직판매장을 운

영 중에 있다. 그 밖에도 요초당(세미나실), 황토방(숙박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2. 안덕 파워빌리지 마을 사업

완주군의 파워빌리지 사업은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의 단계에 속해 있다.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에 의한 지역재생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마을회사육성과 지역공동체회사가 바로 그것이다.

마을회사는 소농이나 가족농, 고령농이 참여할 수 있는 협업경영의 확대를 통해 유무형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농순환의 핵심 근거지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읍면과 연계되는 지역사회 거점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추구 하기 위해 완주형 마을회사 모델을 제시하였다.

<표 V-5> 완주형 마을회사 모델

설립목적	협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조직구성	마을 전체가구의 50%이상(법정리 40%이상)
거점공간	영농권과 생활권이 동일한 마을단위(자연마을, 법정리)
사업내용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및 농촌체험관광
수익배분	순수익의 20% 이상 사회적 서비스 제공(정관명시)
의결권	출자 비율에 상관없이 1인 1표(제도적 장치마련)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혼합

완주군은 마을회사의 단계적 발전지원을 하고 있으며(<표 V-6>참조),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체계 내용에는 마을회사육성센터를 두어 현장밀착성을 강화, 협력기관 등과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현장지원, 공동마케팅 시스템 구축 및 실행, 마을 CEO나 사무장 인재발굴 및 파워빌리지 파견 등을 통한 인재양성 및 실무능력 배양프로그램 등이 있다.

완주군의 마을회사 단계 중 파워빌리지 마을은 향후 마을회사로의 자립을 위한 도약 단계로 영농조합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안덕마을 역시 4개 마을 54명(장파, 미치, 신기, 원안덕)으로 구성된 인덕파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안덕마을은 파워빌리지로 선정되고 ‘소풍가고 싶은 마을’이라는 마을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를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마을주민 역량강화 및 체험전문 인력의 육성, 내실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 단계별 발전전략에 따른 완주군 및 국가지원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완주군은 인터넷을 통해 파워빌리지 공동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2010년 파워빌리지 사업으로 약 3억 원을 유치하였다.

<표 V-6> 완주군의 단계별 마을 육성 전략

단계	맛있는 마을	참살기 마을	멋있는 마을	파워 빌리지	마을회사
	발굴	육성	육성	도약	자립
사업유형	공동체 조직화	소득사업 활성화	생태경관 자원화	융복합 산업화	경영안정화
지원대상	신규마을 전체	맛있는 마을 선행	참살기, 파워빌리지	참살기, CB시범 선행	파워빌리지
사업단위	자연마을	자연마을	행정리/법정리	행정리/법정리	행정리/법정리/권역
사업개소	매년 30개 내외	매년 20개 내외	매년 10개 내외	매년 10개 내외	매년 10개 내외
지원기간	6개월	1-2년	1년	1-3년	1-2년
지원조건	전액보조	자부담10% (현물, 현금)	자부담10% (현물, 현금)	자부담20% (현물, 현금)	자부담20% (인건비)
조직형태	마을공동체	마을추진위	마을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상법상 회사도 포함됨
지원금액	100만원/6개월	5,000만원/년 (HW: 90%, SW 10%)	10,000천원/년 (HW: 70%, SW 30%)	100,000천원/년(HW: 70%, SW: 30%)	100,000천원/년 (HW: 10%, SW: 90%)

<표계속>

단계	맛있는 마을	참살기 마을	멋있는 마을	과워 빌리지	마을회사
	밭굴	육성	육성	도약	자립
지원분야	전통막걸리 밭굴 조리재료 비지원	가공유통 판매시설 (농산물가 공시설, 농가레스 도랑 등) 주민조직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사업모니 터링	생태경관 자원화 생산시설 경관시설 도농교류 시설 주민복지 시설 등	체험휴양 기반확충 브랜드마 케팅 직거래마 케팅 마을축제 밭굴 마을경관 조성 중장기발 전계획 주민역량 강화	마케팅홍 보 경영안정 화지원 온라인마 케팅 고객관리 마케팅
국도비 연계	-	체험휴양 마을지정 건강장수 마을 가공활성 화마을	-	전북향토 산업마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산촌생태 마을 체험휴양 마을지정	사회적기 업연계 농어촌공 동체회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무장 지원	-	-	-	월 1500천 원(자부담 20%)	월 1500천 원(자부담 20%)
CEO지원	-	-	-	-	월 2000천 원(자부담 20%)

출처 : 완주군 마을공동체회사 육성 종합지침(2010)

<그림 V-4> 안덕 파워 영농조합법인 조직도



3. 정부지원에 대한 안덕 마을 주민 인식

안덕마을의 경우 마을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관심이나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에서 파워빌리지 사업에 선정되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시작되었다. 안덕마을은 완주군의 사업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시설물 등 하드웨어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안덕마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군 사업이다 보니깐 그 사업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관심은 있는데 이런 생각들에 (군 사업이) 불씨가 되어서 그런 거죠.

-안덕마을/안덕 파워영농조합법인 총장

(파워빌리지에 선정되어서)1년에 5,000만원을 받았는데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것 위주로 사용했구요. 야외 화장실 이런 게 마을에 없었거든요. 저희가 가진 출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거기에 보태었어요.

-안덕 파워영농조합법인 사무장

2012년 현재 완주군 파워빌리지 사업에서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안덕마을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인건비 지원이 없어 인건비를 받지 않았다. 안덕마을 촌장은 안덕마을이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마을 간판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지원받았는데 큰돈은 아니었어요. 완주군에서 인건비 지원은 없었고. 완주군이 사무장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장 지원금은) 올해 들어서야 생겼지.

-안덕마을/안덕 파워영농조합법인 촌장

안덕마을이 받고 있는 재정적 지원은 지원금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실제적으로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은 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보조 사업이다 보니 명목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월 하라고...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농어촌공사나 전북도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원내역이 같으니깐 여기저기 중복이 되어서 사업 신청을 못할 때도 많아요.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니까.

-안덕 파워영농조합법인 사무장

완주군은 파워빌리지 사업 외에도 공무원의 워크숍이나 교육을 군내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시설이용료 등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 간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사무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완주군에서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걸 마을로 많이 와요. 군수님이 마을로 가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시설이용료 같은 것도 받게 되고...

-안덕 파워영농조합법인 사무장

또한 완주군은 파워빌리지 사업을 통해 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등 전문가들을 통한 정보자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었다. 안덕마을의 경우 완주군이 제공한 마을조사 등이 이후 사업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은 마을에서 해결하기 힘든 전문적인 내용들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안덕마을 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년 차에는 (주요) 마을조사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지. 지원금도 적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되었어요.

-안덕마을/안덕 파워영농조합법인 촌장

또한 완주군의 파워빌리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된 이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적 지원은 마을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의 근거가 되었다. 안덕마을 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파워빌리지 통해서 필요한 마을 조사나 교육이 진행되었어요. 마을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안덕마을/안덕 파워영농조합법인 촌장

완주군의 전담조직 지원에 대한 정책수단으로는 군청 내 농촌활력과의 중간지원조직인 마을회사육성센터를 들 수 있다. 완주군은 농촌활력과를 통해 마을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덕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농촌활력과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농촌의 문제는 농협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어느 도나 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잘 안된다)...(농촌활력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집을 하나 지어도 이부서 저부서 가야하는데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그런 일을 해 주거든요.

-안덕마을/안덕 파워영농조합법인 촌장

(농촌활력과에서) 저희 마을에 자주 와서 관심있게 와 주셔서 다 알게되고... 마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야 감사하죠.

-안덕 파워영농조합법인 사무장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인 마을회사육성센터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다. 안덕마을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뒤에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으며 동시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강의 등을 통해 군내의 다른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초기 단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지원을 하고 있었다. 안덕마을은 성공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례로서 지역 내 다른 조직의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은 이후 지역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의 자양분으로 활용되는 공생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정보를 마을 내부적으로도 나누는 등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안덕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은 완주군이 제공하는 교육·훈련, 정보와 동시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선행자, 혹은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마을회사육성센터 통해서 교육도 받고.

(중략)

CB센터에서는 교육이라든지 많이 하고 하는데...(중략) 우리가 시작할 때는 CB센터가 없었어요. CB센터는 이제 시작한 마을에 관심이 많으니까. CB센터에는 오히려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받고 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다 찾아서 해야지.

-안덕마을/안덕 파워영농조합법인 총장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많이 (교육 등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거의 자립단계라 군에서 교육하기 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 공동체회사로 지원받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마을 주민 교육도 하구요. CB센터에서 (안덕마을로) 답사로 많이 옵니다. 공생하는 거죠.

-안덕 파워영농조합법인 사무장

4. 소결

안덕마을의 경우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상태이다.

안덕마을은 완주군의 자치법규(제7편 농촌활력)와 ‘과워빌리지’ 사업과 같은 법적지원, 그리고 농촌활력과와 지역경제순환센터를 통해 전담조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법적지원과 전담조직 지원은 재정적 지원과 정보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덕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은 전담조직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완주군청 농촌활력과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업을 전담함으로써 지방정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사업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완주군은 조례를 근거로 과워빌리지를 선정하고 있다. 과워빌리지로 선정이 되면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 외에도 마을컨설팅이나 향후 사업공모,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안덕마을의 경우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없었음에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정보 지원은 완주군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간 지원 조직인 지역경제순환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나 자체적인 마을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덕마을의 경우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완주군 내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다른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안덕마을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은 지역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넘

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등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경험을 지역 내 다른 조직에 제공하는, 지역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제4절 정부지원의 효과 논의

본 연구에서는 완주군이라는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선정하여 각각의 사업이 사용하고 있는 정책수단에 대해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책수단은 Hood(1986)의 분류에 따라 재정, 정보, 법적, 전담조직 지원으로 나누었다. 이 중 재정과 정보는 직접적인 지원이며, 법적 지원과 전담조직 지원의 경우 재정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 간접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사업의 효과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의 공통적 효과

먼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비비정 마을과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안덕마을은 '정부지원사업 공모'를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정부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이니셔티브가 되기도 한다는 점은 언급된 바 있다. 김혜민(2010)에 따르면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의 시작에는 정부의 보조

금이 계기가 되기도 한다. 비비정 마을과 안덕마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사례모두 재정적 지원 중 인건비를 수급하고 있지 않으나, 인건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비비정 마을과 안덕마을 모두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해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에서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비탄력적인 사업예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의 특성상 목적이나 사용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의 차별적 효과

첫째로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정부 사업에서 사용되는 정책수단의 조합에서 차이가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신문화공간조성 사업의 경우 재정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정보·법적·전담조직 지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나 네트워크, 주민 역량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적 지원의 경우, 비비정 마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부처의 사업이 지원된 형태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완주군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조례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조례들이 사업의 근거가 된다거나, 중간지원조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효과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덕마을의 경우 완주군의 조례에 지원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파워빌리지로 선정되었는데 선정을 통해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조직 지원의 경우 안덕마을은 지원주체인 완주군과 직접 자주 접촉하는 반면 비비정 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과의 거의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완주군과 주로 접촉하는데 이는 완주군이 중앙정부의 사업비를 대신 집행하고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덕마을의 경우 지방정부가 마련한 중간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정 마을은 중앙정부로부터 중간지원조직을 지원받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교육훈련, 컨설팅 등과 관련해서는 완주군이 제공하는 교육에 참석하거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표 V-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효과와 원인

	효과	원인
공통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작의 계기가 됨 · 인건비 수급 필요성 인식 · 비탄력적 지원금에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적 지원을 중요하게 활용
차별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의 경우 사업주체보다 지방정부와 빈번한 접촉 · 지방정부 지원을 받는 조직은 지방정부 내 전담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을 지원받음. 중앙정부 지원받는 조직은 독자적인 네트워크나 지역 내 자원 활용 · 지방정부 지원 받는 조직은 조례나 인증을 통해 지원 근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사업은 주로 지방정부를 통해 사업의 지도 감독이 이루어짐 · 중앙정부 사업에는 법적 지원이나 중간지원조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앙정부 사업에는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최근 사회적 경제와 함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 최근의 SSM의 지역시장 잠식, 대기업 유치 중심의 지역경제 등으로 인해 지역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이러한 지역문제를 지역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이윤추구를 통해 자립적 운영을 하는 조직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성을 통한 자립적 조직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지원정책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지,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둘째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에서 정책의 주체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나 정책수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대해 정책대상자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따라 동원되는 자원의 종류와 규모의 차이가 정책대상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정책수단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비비정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림수산물부의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지방정부의 사업으로는 완주군의 파워벨리지로 선정된 안덕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책수단 종류에 대해서는 Hood(1986)에서 제시한 재정, 정보(교육·훈련, 컨설팅 등), 법적 지원(인증 등), 공식조직(전담조직이나 중간지원조직)의 분류하였고 참여자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지원주체가 중앙정부인 경우와 지방정부인 경우를 각각 조사한 결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나타났다. 공통점은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니셔티브가 되었다는 점, 인건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비탄력적인 재정사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지방정부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은 법적지원(인증), 전담조직 지원(농촌활력과, 중간지원기관), 정보를 지방정부를 통해 지원받는 반면, 중앙정부를 통해 지원받는 조직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활용하거나(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활용(정보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지원기관에 따라 정책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 지방정부에 비해 재정적 수단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보적 지원 및 법적 지원, 그리고 공식조직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 그에 반해 지방정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정책의 수단으로 조례나 인증 등과 같은 법적 지원, 관료제 내 과의 신설과 중간지원조직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은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부족한 정보나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는 지역 내 자원과 외부 연구조직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경우 지역 내 활용은 물론, 초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에는 지방정부의 법

적·전담조직 지원 등이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최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는 사회적경제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실업문제, 지역경제 쇠퇴, 지역사회 내 영유아 보육 및 노인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이 오히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가진 자율성이나 지역성, 공공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은 궁극적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촉매제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육성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정부지원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많이 만드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생겨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가진 속성들을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니셔티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그리고 시민실패를 주민참여와 사회적경제의 방법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이 이러한 움직임을 촉발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역시 하나의 사업체로서 이윤추구를 하는 만큼 정부지원에 일방적으로 의지하기 보다는 ‘비즈니스’ 조직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사업 자체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시키는 데에 머물 필요가 있으며 정부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은 초기 단계에 한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성격에 따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이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경직된 사업비 사용은 자원활용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사업비의 방만한 운영이나 부정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식의 접근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려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지원은 또한 사회적경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완주군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이 있어 커뮤니티 비즈니스 참여자들이 정보를 취득하는데 용이하였으며, 단순한 정보수혜자를 넘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외부의 지원조직과의 MOU 체결은 물론, 지역 내 구축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성을 살려 전국 단위, 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나 전담조직을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효과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책으로 흡수한 것은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았다. 분석한 사례 모두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를 분석하기에 다소 이르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데

이더 축적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 가토 요시마사. 나주몽 역. (2009). 도시 생활과 커뮤니티 비즈니스도시. 도시 경제와 산업 살리기. 한울 아카데미.
- 강원발전연구원. (2010). 지역공동체사업(CB) 및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정책브리프 (81). (2010-20).
- 경기발전연구원. (2010). 생태계보호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 및 활성화 방안. policy brief 42. (2010.12).
- 경남발전연구원. (2010).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색과 경남의 도입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이슈분석 2010-17.
- 국토연구원. (2009).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정원. (2009).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서울 : 아르케
- 김준호. (2010).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야기. 희망제작소 자료.
- 나카지마 에리, 김상용 옮김. (2009). 영국의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파트너십과 지방화. 서울 : 한울아카데미.
- 박용규. (2009a).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대안, 커뮤니티 비즈니스.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728), (2009.10.28)
- 박영규. (2009b).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 및 활용방안 -CB 활성화 과제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지역발전위원회 (2009.11.27.)
- 박영규. (2009c).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2009.09.21)
- 소영진. (2008). 공공성의 개념적 접근. 윤수재, 이민호, 채종현 편저. 새로

- 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32-63. 서울: 법문사. 2009.
- 시바타 이쿠오. (2009). 소호와 함께 마을만들기. 서울 : 아르케
-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유럽경험과의 비교와 시사점. 서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 사회.
- 유정규. (2006).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의의와 과제. 농정연구 18.
- 이사 아쓰시, 마쓰오 다다스, 니시카와 요시아키 저, 최선주, 진영환, 정운회역. (2007).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커뮤니티 비즈니스 편. 서울 : 한울아카데미
- 정선희. (2004). 한국의 사회적 기업. 서울: 다우.
- 주성수. (2010). 사회적 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발전 방안 연구.
- 함유근, 김영수.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현대경제연구원. (2006). “CB” :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모형. Global Management Insight 06-02. pp.1-9.
- 현대경제연구원. (2006). 커뮤니티 비즈니스 :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모형. 현대경제연구원 Global Management Insight(2006.02.02)
- 호소우치 노부타카, 정정일 역. (2008).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비즈니스. 서울 : 이매진
- 희망제작소. (2008a).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소 창립포럼 자료집 (2009.08.27). 서울: 희망제작소.
- 희망제작소. (2008b).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2008.09.18-19). 서울: 희망제작소.
- 희망제작소. (2010). 지역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략

포럼(2010.11.03). 서울: 희망제작소.

2. 논문

- 곽현근·유현숙. (2005).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과 집합적 효능감.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347-376.
- 권홍재. (2011). 커뮤니티비즈니스 방식의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활성화 요인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
- 김경휘, 반정호. (2006).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6(4): 41-47.
- 김선기.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정책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KRILA Focus 제37호.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영수, 박종안. (2009). 한국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소에 관한 사례 연구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9(2) : 167-206.
- 김윤호.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1).
- 김재현. (2008).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국토 (321) : 29-35.
- 김종수. (2009). 지역기반형 사회적 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 논문.
- 김혜민. (2010).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니가타현 이와후네 지역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3): 171-195.
- 김혜민. (2011).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

사학위논문.

문명재. (2008). 정책도구연구의 학문적 좌표와 이론적 연계성: 새로운 분야 아니면 새로운 시각?. 정부학연구 14(4): 321-346.

박상필. (2000). NGO의 재정 충원 방안: 정부지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415-431.

박상필. (2004). NGO에 대한 정부 지원 논쟁: 현실과 대안. 현상과 인식 28(4): 168-188.

박수지, 엄태영. (2010).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 경제적 성과의 모순관계와 전통적인 사회경제조직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0(1): 287-311.

박종안. (2010).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성공모델에 관한 사례연구-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중심으로. 숭실대 박사학위 논문.

안혜원 · 이민규. (2010).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방안.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82-201.

엄형식. (2005). 유럽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 개념과 시사점. 도시와 빈곤 (76): 78-117.

엄형식. (2009). 벨기에 사회적기업의 약사와 제도(1). 자활읽기 2: 34-37.

이광우, 권주형. (2010). 사회적기업의 역량요인이 공익적 성과와 영리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3(1): 261-292.

이석표. (2009). 일본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정책과 한국에의 도입방안: 일본의 중앙 지방정부 및 중간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충북대 박사학위 논문.

이영환. (1998). 지역사회 주민조직에 관한 이론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392): 7-26.

이인재. (2006).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과 사회적 기업 '컴윈'. 복지동향

- (88): 9-15.
- 임의영. (2003).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고려대학교 논집 9(1): 23-50.
- 임의영. (2010).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고 44(2): 1-21.
- 장성희, 반성식. (2010).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 지향성과 시장 지향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보 23(6): 3479-3496.
- 장원봉. (2007). 사회적 경제와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시민사회와 NGO 5(2): 5-34.
- 장인봉, 장원봉. (2008). 공동생산자(Co-producer)로서 지방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파트너십(Partnership) 형성과 전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299-320.
- 장정순. (2007). 미국의 사회적 기업의 재원조달 방안. 한국비영리연구 6(1): 273-381.
- 전영미(2011). 농촌지역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마을 가꾸기 사업의 추진 현황 분석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7-202.
- 전영환, 이영희. (2010). 정책수단연구 : 기원, 전개, 그리고 미래. 행정논총 48(2): 91-118.
- 정규호. (2008). 풀뿌리 사회경제 거버넌스의 의미와 역할: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6(1): 113-148.
- 정대용, 이세호. (2008). 커뮤니티 비즈니스(CB)지원에 관한 선진사례 고찰과 국내활성화 방안. 한국창업학회지 3(1): 91-116.
- 조규원, 최조순, 김종수.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적 정당성. 도시행정학보 24(1): 263-281.

- 천상총일. (2007).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사업에 관한 일고찰. *일본학보* 73(2) : 97-307
- 최재송. (2007). 근린 주민조직의 특성에 관한 사례연구. *지방행정연구* 21(2): 95-115.
- 한상일. (2003).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함의. *한국행정학보* 37(3): 159-180.
- 한상진. (2005).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찰.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Borzaga, C. & Torita, E. 2009. Social enterprise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edited by. A. Noya.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s*. OECD. 195-228.
- Carter, A. 2004. Social enterprise and urban rebuilding in Europe. edited by. OECD. *Entrepreneurship: A Catalyst for Urban Regeneration*. pp.159-199.
- Coates, A. & Opstal, W., Van. 2009. The joys and burdens of multiple legal framework for social entrepreneurship: lesson from belgian case. *Working papers on social and co-operative entrepreneurship WP-SCE*.
- Defourny, J. 2006. 확장된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 개념과 현실.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4(6): 4-21.
- Glen A. & Steve W. 2008. *What role for community enterprises in tackling poverty?*. York: Joseph Rown tree Foundation.
- Harvey, J. & Doug, L. 2004. Depleted communities and community business entrepreneurship : revaluing space through place.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6(3), 217-233.

- Haugh, H. 2007. Community-Led Social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March, 2007: 161-182.
- Haugh H. & Pardy W. 1998. Community entrepreneurship in north-east Scot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Research* 5(4): 163-172.
- Hayton K. 1995. Community involvement in economic regeneration - lessons from North East England.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0(2): 169-179.
- Hayton K. 2000. "Scottish community business: An idea that has had its day?", *Policy and Politics* 28(2): 193-206.
- Hayton, K. 1984. Community Business : a new role for the planner. *Journal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27(2), 79-84
- Hayton, K. 2000. Scottish community business : an idea that has had its day?. *Policy & Politics* 28(2): 193-206.
- Johnstone, H. & Lionais, D. 2004. Depleted communities and community business entrepreneurship: revaluing space through place.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6(3): 217-233.
- Lyon, L. & Miller, J. 1997. Community. edited by Vogel, R. K. 1997. *Handbook of Research on Urban Politics and Policy in the United States*. Westport: Greenwood Press.
- Leeming K. 2002. Community businesses. Lessons from Liverpool, UK,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7(3): 260-267.
- Loza, J. 2004. Business-community partnerships : the case for community organization capacity build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53(3), 297-311

- McArthur, A. 1993. Community Business and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30(4), (5), 849-873.
- Moulaert, F. & Ailenei, O. 2005. Social Economy, Third Sector and Solidarity Relations: A Conceptual Synthesis from History to Present. *Urban Studies* 42(11): 2047-2053.
- Pearce J. 1993. *At the heart of the Community Economy. Community enterprise in a changing world.* London: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 Tracey, P., Phillips, N., Haugh, H., 2005. Beyond Philanthropy: Community Enterprise as a Basis for Corporate Citizenship, *Journal of Business Ethics* 58. 327-344.
- Wheeler, D., McKague, K., and Thomson, J., Davies, R., Medalye, J., and Prada, M. 2005. Creating Sustainable Local Enterprise Network. *MIT Sloan Management* 47(1): 33-40.

3. 기타

완주군청 홈페이지(<http://http://www.wanju.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희망제작소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소 블로그(<http://blog.makehope.org>)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munity Business Policy

-Focusing on the Different Effect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Na Jinhui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the study on effects of the community business policy focusing on the different effect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y.

Recently social economy including community business stands out as a solution to distressed region economy. Therefor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nforce the supporting policy for community business promoting. However, is government supports for community business appropriate?

The first purpose of this paper is analysis on appropriateness of government supporting policy for community business promoting. 'Community Business' organizations should have autonomy and independency for sustainable management.

The second is analysis of th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agency of community business policy in terms of policy tools.

As a result, there are differences and commons by supporting agency.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have commons in terms of financial support –financial support is the important initiative of community business starting, community business participants’s recognition of the need of labor costs, difficulty of inelastic financial operation.

This study found differences of policy tool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policy.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has legal support, bureaucracy & the mediation supporting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policy tools. On the other hand,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was focused on the financial support.

The cause of this different is that supporting agencies use dissimilar policy tools.

From now 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nvironment in which community business flourish. Thus, community business policy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business.

**Key Words: community busines,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policy means, policy tool**

Student Number : 2009-22080